

# 한중경제포럼

제21-02호 2021년 6월 29일

## 중국 경제의 최근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 및 전망

### 2021년 제2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중국 경제: 현황, 정책 방향 및 전망
2. 일 시: 2021. 06. 09(수) 16:00~18:00
3. 발표자: 중국 국가신식중심 주바오량(祝宝良) 수석이코노미스트

### 1. 최근 중국의 경제 현황

- 코로나19의 충격, 글로벌 경제의 침체, 미국의 대중 압박 등 충격 속에서도 2020년 중국은 가장 먼저 코로나 확산을 통제하고 업무 복귀와 생산 재개를 추진하였으며, 플러스 성장을 회복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음.
  - [분석방법과 틀] 2019년도 통계를 기초로 두 해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계산하고, 한계적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전기대비 증가율을 계산;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미시경제를 살펴보기 위해 PMI, 소비자신뢰지수, 빅데이터 등을 분석함.
    - 2020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매 분기 상승하면서 -6.8%(1Q), 3.2%(2Q), 4.9%(3Q), 6.5%(4Q)를 기록하였고, 연간 GDP 성장률은 2.3%를 달성함.
    - 글로벌 GDP 성장률이 3.3% 하락한 상황에서 중국은 G20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함.
-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 중이지만 회복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으며 GDP 갭도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으로, 올해 하반기가 되어야 정상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 1분기 GDP 성장률은 18.3%로 대폭 상승하였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성장률은

각각 8.1%, 24.4%, 15.6%를 기록함.

- 잠재성장률을 6%로 본다면, 1분기 성장률의 기저값(基数)은 13% 정도임.
- 2021년 1분기의 성장률은 전기대비 0.6% 상승하였고, 경제 회복 속도는 점차 늦춰지는 추세를 보임.
- 2015~19년 1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약 1.7% 정도였고, 2020년 각 분기별 전기대비 성장률은 각각 9.3%, 10.1%, 3.1%, 3.2%였음.
- 2021년과 2019년의 1분기 성장률은 평균 5% 미만으로, 5.5~5.7% 정도의 잠재 성장률에 비해 GDP 값이 여전히 존재함.
- 2015~19년 매 1분기 성장률은 6.4~7%였으며, 코로나19 이전 중국이 전망한 '14·5' 계획 기간의 잠재성장률은 5.7~6% 정도였음.

□ 경기 회복상황은 불균형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 공업 분야와 대기업은 대부분 정상 수준을 회복했지만,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은 회복 속도가 더딤.

- [공업] 2020년과 2021년 1~4월의 평균 공업 성장률은 6.8%로, 2015~19년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설비투자율은 역대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서비스업] 디지털 경제가 대폭 성장한 반면, GDP의 19%를 차지하는 소매, 교통, 숙박, 요식, 임대, 비즈니스 서비스 등 대면 및 오프라인 거래가 이뤄지는 서비스업은 아직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함.
- 2020~21년 1분기 3차 산업의 평균 성장률은 4.7%, 2015~19년은 7~7.8%수준으로 평균 7.5%를 기록
- [대기업] 항공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업은 정상 수준을 회복함.
- [중소·영세기업] 소매, 서비스업의 생산 지수, 3차 산업의 부가가치 등 지표의 차이로 볼 때, 중소기업이 아직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함.

□ 외수와 정책의 견인 하에 수요가 점차 회복 중이며, 수요의 전기대비 증가율이 공급보다 빠르고 투자와 소비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회복중임.

- 2020년 전국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대비 2.9% 증가하였고 2020년과 2021년 1~4월의 평균 증가율은 3.9%임.
- 2020년 각 분기별 전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6.1%(1Q), 3.8%(2Q), 8.8%(3Q), 15.7%(4Q)를 기록

그림 1. 규모이상 공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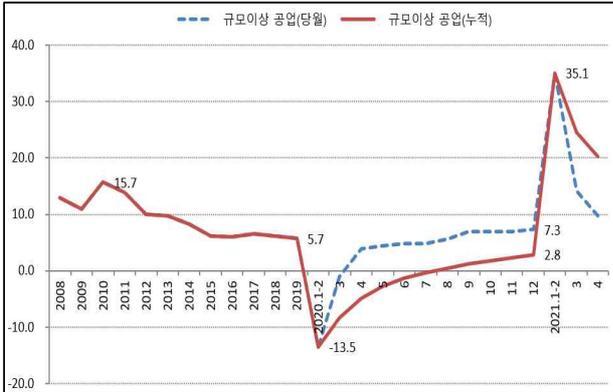


그림 2.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 부동산투자는 2020년 3월부터 가장 먼저 회복되기 시작해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20년 부동산 개발투자는 전년대비 7.0% 상승하였고 2020년과 2021년 1~4월의 평균 증가율은 8.4%를 기록함
- 인프라투자는 2020년 4월부터 성장세를 보였으며, 향후 기존 하드 인프라의 투자 확대 가능성이 축소되는 대신 교육, 의료 등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있음.
  - 2020년 전력분야 투자를 포함한 인프라투자는 전년대비 3.3% 증가함.
  - 또한 중국이 셋째 자녀 출산 허용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향후 교육·의료면의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큼.
- 제조업투자는 2020년 8월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2020년은 전년대비 2.2% 하락함.
  - 2020년과 2021년 1~4월의 평균 증가율은 0.3%로 투자자들의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 지속 및 탄소피크 이슈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제조업의 투자 증가가 부진한 상황임.
- 소비의 회복도 가속화되는 추세이나 아직 기대치에 도달하지는 못함.
  - 2020년 소비재 소매판매총액은 전년대비 3.9% 감소하였으며, 2020년 및 2021년의 1분기 평균 성장률과 2021년 1~4월의 평균 증가율은 모두 4.2%임.
  - 주민들의 한계소비성향은 동기대비 2.0%p 증가됨.
  - 중소·영세기업의 고용창출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소비의 회복도 기대치보다 느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서비스 소비나 정부 소비(재정지출 확대) 측면에서 회복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 수출은 2020년 3월부터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고 예측치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수출의 강세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장기간 지속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함.
  - 2020년도 각 분기별 수출 증가율(달러 기준)은 -13.3%(1Q), 0.1%(2Q), 8.8%(3Q), 15.9%(4Q)를 기록하였고, 2020년 수출, 수입, 무역수지 흑자의 연간 증가율은 각각 3.6%, -1.1%, 26.9%를 기록함.
  - 2020년과 2021년의 1~4월 수출과 수입의 평균 증가율은 각각 14.5%, 11.4%임.



외 유입으로 인한 것임.

- 단기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나 공급이 아직 잠재 생산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함. 특히 해외의 철광석, 석유, 유색금속 등의 생산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가격 상승을 초래함.
  - 중국, 미국, 일본, EU 등의 지역이 아직 잠재 생산력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현재의 가격상승 추세는 생산의 회복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서 향후 코로나19가 점차 통제된다면 공급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공급과 수요의 갭이 축소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국내 생산 제약의 경우 2030년 탄소피크 및 2060년 탄소중립 계획과 관련된 것임.
  - 내년 미국이 어떤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인가에 따라 앞으로 상품 가격이 변동할 수 있음.
- 또한 향후 원자재 상품 가격의 상승세는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번 물가 상승의 국내 요인은 대규모 인프라투자를 실시했던 2009년의 상황이나 공급측 개혁으로 인해 중국의 원자재 상품 가격이 대폭 상승했던 2016년의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석탄, 철강, 건축자재, 일부 화학공업품 등 업스트림 산업의 상품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탄소피크의 달성과 생산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생산제한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임.
  - 생산제한정책으로 생산이 조정된 이후 5월 중순부터 원자재 상품 가격이 하락(전기대비)하기 시작했음.

□ 취업 압력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일자리 부족은 여전하며, 특히 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요식, 관광, 레저, 문화, 가사서비스, 물류 등 노동집약형 업종에서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됨.

-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련 중소·영세기업의 생산이 아직 정상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일자리 부족 문제가 발생함.
- 2020년 12월 전국 도시지역 조사실업률은 5.2%, 2020년 연간 평균은 5.6%로, 전년대비 0.5%p 상승함. 2020년 전국 도시 신규 취업자수는 1,186만 명으로 조사됨.
  - 2021년 4월 도시지역 조사실업률은 5.1%임.
- 특히 농민공과 16~24세의 신규 졸업생의 취업률이 비교적 낮은 양상을 보임.
- 2020년 외지취업 농민공 수는 전년도에 비해 466만 명이 감소된 1억 6,959만 명, 2021년 1분기 외지취업 농민공 수는 2019년 1분기보다 246만 명이 감소한 1억 7,405만 명이었음.
  - 2021년 4월 16~24세 실업률이 13.6%로 상승함.

## 2. 중국이 직면한 국제 환경 및 영향

□ 전 세계는 백 년만의 대격변을 겪고 있으며, 미·중 관계와 코로나19 사태가 이를 가속화함.

- 미국 등 공업 국가들의 잠재 GDP가 하락하고 있으며, 코로나19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침체를 초래함.
  - 2008년이후 세계 경제에는 "3저 3고(三低: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三高: 높은 부채율, 높은 자산가격, 큰 소득격차)" 현상이 나타남.
  -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3%, 세계 무역증가율은 -5.3%를 기록,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과 무역증가율은 각각 6%대, 8%대로 회복됨.
  - 저소득국가와 각국의 저소득계층은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임.
  - 세계 각국은 효율과 공평 문제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며, 공평의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해야 할 것임.
-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안보와 관련된 산업이 자국으로 회귀하는 등 글로벌 산업체인의 재편 현상이 나타났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분산화·다원화·지역화가 진행됨.
  - 글로벌 산업체인·밸류체인·공급체인의 재편은 세계적으로 2~3개의 경제시스템을 형성함.
- 주요 국가의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이 지속되면서 금융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점점 불안정해짐.
- 신흥대국과 기존 강대국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고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고 있음. 미국은 인적교류, 무역, 투자, 금융, 과학기술, 안보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의 빠른 발전과 추격을 억제하고자 함.

□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생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미국 경제의 회복은 단기 내 빠르게 이어질 것임.

- 미국 등 선진국들은 연내에 집단 면역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공급을 늘리고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고압력경제(high-pressure economy)를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견인하고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미국은 1.9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2.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을 추진할 계획임.
  - 2021~22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6% 정도 예상됨(2000~08년과 2008~19년의 미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2.7%, 2.2%정도였음).
- 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금리인상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 달러는 안정적인 추세임. 통화 정책은 기존 예측보다 조기에 긴축모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수개월 동안 미·중 양국은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으나 최근 정상간 통화가 이뤄지면서 경제관계 면에서 완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국내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 때 양국 무역관계도 완화될 여지가 있음.

- 6월 초에 중국 류허(刘鹤) 부총리와 미국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이 화상 통화를 진행하면서 양

국 갈등이 심화되는 우려가 완화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의 기대심리를 향상시킴.

- 미·중 관계가 완화된다면 앞으로 중국과 EU,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일부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미국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도 증가할 것이므로 관세 문제도 개선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투자, 기술, 인적 교류 등 면에서는 당분간 완화될 가능성이 없으며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효과적으로 통제된 후에도 산업 조정, 산업 이탈 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산재함.

□ 중국은 국내 대순환을 주제로 하고 국내·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의 형성을 촉진하고자 함.

-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수출국의 에너지와 원재료 공급 → 중국 생산 → 미국 등 선진국 소비" 방식의 발전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움.
- 핵심 설비, 부품, 원재료의 수입이 중단되고 산업체인·공급체인이 단절되는 위험이 출현함.
- 일부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일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채무 상황을 미루고 있어 대외투자의 안전이 영향을 받음.
- 단기 금융자본이 중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유입되면서 위안화 환율의 평가절상 및 국내 자산의 버블화 압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3.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문제점

□ 중국은 교육, 인구, 소득 격차, 체제 및 메커니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장기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 교육 수준이 낮고,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 부족하며, 에너지·자원·환경의 수용능력 등이 불충분함.
-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도농·지역·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큼.
- 요소시장, 국유기업 개혁, 행정관리 시스템, 재정 및 조세 시스템, 금융 감독 등 체제 및 메커니즘의 문제가 있음.

- 실물경제의 구조적 모순, 금융과 실물경제의 모순, 금융과 부동산의 모순 등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중국의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의 영향, 산업체인·공급체인의 불안정한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해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접촉형·밀집형 소비수요의 회복이 더디고 수출은 불확실성이 있음.
- 일부 핵심 설비와 부품의 수입이 중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체인·공급체인의 안전이 위협을 받으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비용 절감 정책, 사회보험 납부면제 혹은 납부연장 정책, 원리금 및 이자 납부연장 정책 등 우대 정책들이 점차 취소되면서 기업의 비용과 부담이 증가됨.
  - 정책측면에서 이미 국내 중소·영세기업을 대폭 지원하고 있어 더 이상 효과적인 정책지원의 여지가 거의 없음.
  - 용자면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금융리스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

- 2020년 중국의 거시부채율은 25%p 증가하면서 GDP 대비 280%까지 상승함.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율이 모두 상승함.
- 사회보험 감면 및 납부연장 정책과 7.3조 위안 규모(영세기업 대상 포용성 대출 4조 위안) 포함의 원리금 및 이자 납부연장 정책 종료 후 일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일부 은행의 불량대출이 증가됨.
- 일부 지방정부들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의 생산량이 정체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음성적 채무에 대한 디폴트가 증가할 수 있음.
- 그러나 2016년 이후 금융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해 왔으므로 지방정부의 리스크는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지방정부의 리스크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에너지, 원자재 등 업스트림 상품은 대부분 재정능력이 약한 북방 지역에 있고 소비재 등 다운스트림 상품은 대부분 재정능력이 강한 연해지방에 있어 일부 금융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특별채권을 발행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수 있음.

□ 부동산 조정 문제와 기후 및 환경보호 문제에 직면해 있음.

-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 개혁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임.
  - 부동산세를 실시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대폭 상승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대폭 하락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의 로드맵 및 전략 문제에 직면해 있음.
- 법률과 제도를 제정하고 탄소시장을 통해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행정적인 수단으로 생산을 제한하는 방법을 피해야 할 것임.

## 4. 2021년 주요 정책 건의

### □ 거시조절정책의 연속성·안정성·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함.

- 경기회복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하여 거시정책의 수위를 조절하고 정확성과 유효성을 더욱 강화하되 정책을 급선회시키지 않아야 함. 거시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켜야 함.
-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유효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과학기술, 민생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강화하여 '14·5' 기획 기간 중 국가 중대전략과 중대임무의 효과적인 실시를 추동해야 함.
  - 세금 감면·비용 절감 정책을 점진적으로 취소하고, 구조적 감세 정책은 계속 실시해야 함.
- 온건한 통화정책을 정확성, 융통성, 합리성 원칙에 따라 실시해야 함.
  - 통화공급과 사회용자 규모의 증가속도는 명목 GDP 성장률에 부합해야 함.
  - 과학기술 혁신, 영세·소형기업, 녹색발전을 지원해야 함.
  - 자본금을 보충하여 환율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시켜야 함.
-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형성하는 첫 걸음을 잘 내디뎌야 하며, 공급측 구조개혁을 중점으로 하는 동시에 수요측 관리도 중시해야 함.

### □ 혁신형 국가 건설을 가속화해야 함.

- 세계 최첨단 과학기술, 경제발전, 국가 중대 수요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해야 함.
-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며, 인재의 혁신활력을 자극하고,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을 완비해야 함.
- 인공지능, 양자기술, 집적회로, 생명과학, 뇌과학, 바이오 육종, 항공과학기술, 심지(深地)·심해(深海) 등과 관련한 첨단기술을 발전시켜야 함.

□ 현대 산업시스템의 발전과 산업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함.

- 산업체인·공급체인의 자주적 통제가능성을 강화하고, 핵심기술 확보 문제를 해결하며,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함.
- 현대 산업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산업 기초의 고급화 및 산업체인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함.
- 전략적 신흥산업과 현대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함.
- 디지털경제, 녹색경제의 발전을 추진하고, 2030년 탄소피크와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함.

□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확대를 추진해야 함.

- 일자리 촉진을 근본으로 하여 사회보장 시스템을 완비하고, 소득분배를 최적화하여 중산층의 비중을 확대해야 함.
- 더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소득분배를 실현해야 함. 중산층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며, 과도하게 높은 소득을 조절하고, 불법 소득에 대해 엄격히 단속해야 함.
- 소비 환경을 개선하고, 제품의 품질과 표준을 제고해야 함.
- 도시군·도시권을 중심으로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고, 신형인프라 건설·신형도시화 및 교통·수리 등 중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부동산을 경제 자극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전제로 안정시켜야 함.
  - 부동산세 제도를 실시하면 토지제도의 개혁을 견인할 수 있음.
  - 신규 유입된 도시민과 젊은 사람들이 주택 매매·임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발전시켜야 함.

□ 사회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의 완비를 가속화해야 함.

- 재산권 제도와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를 완비하고 요소배치 효율을 제고해야 함.
- '국유기업 개혁 3년 액션플랜'을 잘 실시하는 등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해야 함.

- 현대적인 재정제도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예산 제도, 지방세제 등 제도를 완비해야 함.
- 온건한 통화정책과 신중한 거시관리정책을 바탕으로 금융 개혁을 추진해야 함.
- '放管부 개혁'(放管服改革: 행정간소화, 시장기능 강화, 서비스 개선)을 완비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시켜야 함.
- 반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강화해야 함.

□ 전면적인 개방의 새로운 구도 및 글로벌 경제 전략을 형성해야 함.

- 국제경제무역 규칙의 혁신과 무역의 질적 발전을 추진해야 함.
- 해외 투자(走出去)와 투자 유치(引进来)를 병행하는 투자 전략을 실시하고자 함.
- 대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가속화해야 함.
- 외교, 해외 원조, 문화 소프트파워 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함.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

## 5. 경제 전망

□ 2020년의 기저효과로 2021년에는 보상형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 2021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8.5% 정도로 예상되며, 전고후저(前高后低)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2, 3, 4분기의 GDP 성장률은 각각 8%, 6%, 5% 정도로 예상함.
- 부동산과 인프라건설 투자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제조업투자가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 2021년 도시지역의 연간 투자 규모는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소비에서 보상형 반등 현상(보복소비)이 나타날 것이며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 될 것임.
  - 2021년 소비재 소매판매총액은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2020년 수출에 영향을 미쳤던 기본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수출입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2021년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15%,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물가상승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리 크지 않음.
  - 이월효과(翹尾因素)가 2021년 CPI, PPI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0%p, 1.4%p 정도로 예상함.
  - 2021년 CPI와 PPI는 각각 2%, 5.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표 1. 2021년 중국 경제 전망(%)

지 표	2019년		2020년		2021년 예측치	
	억 위안	%	억 위안	%	억 위안	%
GDP	986,515	6.0	1,015,986	2.3	1,133,000	8.5
1차 산업	70,467	3.1	77,754	3.0	81,650	3.5
2차 산업	386,165	5.7	384,255	2.6	438,100	8.8
3차 산업	534,233	6.9	553,977	2.1	613,250	8.5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	-	5.7	-	2.8	-	8.5
도시 고정자산투자	551,478	5.4	518,907	2.9	570,800	10.0
부동산투자	132,194	9.9	141,443	7.0	152,700	8.0
소비재 소매판매총액	411,649	8.0	393,981	-3.9	441,260	12.0
수출 (달러)	24,984	0.5	25,906	3.6	29,800	15.0
수입 (달러)	20,769	-2.8	20,556	-1.1	25,700	25.0
CPI		2.9		2.5		2.0
PPI		2.0		-1.8		5.5

□ '14·5' 기획 시기 실질 GDP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근접하거나 심지어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함.

- 코로나19의 충격과 미·중 무역분쟁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의 총요소생산성은 2.2% 정도, 취업자 증가율은 0%, 잠재 GDP 성장률은 5.2~6.2% 사이, 평균성장률은 5.7% 정도로 추정됨.
- 코로나19에 따른 단기 충격과 미·중 무역분쟁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총요소생산성은 2% 정도, 취업자 증가율은 0%, 잠재 GDP 성장률은 5~6% 사이, 평균성장률은 5.5% 정도로 예상됨.

□ 전략적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 '14·5' 기획 기간 현재 기준의 고소득국가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함.
  - 2024년 1인당 GDP(2015년 가격기준)는 13,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임.
  - 1인당 GDP는 연평균 4.73%의 속도로 증가하여 현재보다 2배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1인당 GDP가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임(명목환율로 계산한 OECD 38개 회원국의 2019년 1인당 GDP는 대략 40,300달러임).
  
- 2050년 부강·민주·문명·조화의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고,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함.

**표 2. 기준 경제 예측**

연도	GDP 총량 (2015년 가격) (억 위안)	기간	GDP 잠재성장률(%)
2015	688,858	-	-
2020	910,823	2016~2020	6.6
2025	1,196,060	2021~2025	5.7
2030	1,541,100	2026~2030	5.2
2035	1,948,200	2031~2035	4.8
2050	3,263,900	2036~2050	3.5

**표 3. 동일한 발전단계를 거친 후의 GDP 성장률 비교**

국가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연도	15년 이내 1인당 GDP 평균속도	15~30년 이내 1인당 GDP 평균속도
중국	2019	-	-
한국	1992	4.8%	-
일본	1973	4.5%	1.5%
독일	1970	2.8%	1.6%
미국	1950	3.5%	2.0%
영국	1967	2.6%	1.3%

## 질의응답(Q&A):

Q 1.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위안화 환율을 6.3 근처에서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입한 바 있음. 이자율 조정 외에 인민은행의 환율 안정을 위한 틀이나 정책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표 중에 위안화 환율의 평가절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6.2까지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는지?

A 1. 우선 저의 주요 연구 분야는 거시경제이기 때문에 미시경제 문제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중국 인민은행은 환율 면에서 이전처럼 자본 규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외화 예금의 지급준비율을 5%에서 7%로 인상하는 경제 수단을 사용했음(외화 지급준비율은 위안화 지급준비율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 외 외화준비금(상업은행의 인민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 200억 달러를 동결시키는 수단도 사용했음. 이러한 수단은 직접적인 효과를 달성하기보다는 일방적인 평가절상이 없을 것이라는 시장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인적으로 이러한 경제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인민은행은 예전에 사용했던 역주기 조절 등의 정책은 사용하지 않고 외환시장에 대한 간섭을 자제하고자 함. 류귀창(刘国强) 부총재도 "중국은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관계에 기초하여 통화바스켓을 참고로 조정을 실시하며, 적절하게 관리하는 변동환율 제도를 변함없이 실시할 것이다."라고 명확히 밝혔음. 단기적으로 볼 때, 위안화 환율의 평가절상 추세는 그리 강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미국이 경제가 호전된 이후 통화 긴축정책이나 금리 인상을 실행할 경우 일시적으로 평가절하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위안화 환율은 지속적으로 평가절상될 것이며, EU의 통일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유로화가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달러의 강세가 이전보다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개인적으로 내년이면 6.2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미·중 간 성장률 격차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절상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함.

Q 2. 얼마 전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인구가 지난해 14억 1,000만 명 정도에 달하고 그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조만간 15%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함. 일각에선 "중국인들이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늙어간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인구 고령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인구 고령화 문제가 향후 '14·5' 계획 기간 혹은 그 이후의 잠재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A 2. 개인적으로 인구에 대한 연구를 해 본적이 없지만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인구 요소가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를 계산할 수 있음. 개인적으로 인구수보다 인구 보너스가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크다고 생각하며 이는 중국 경제학자 차이팡(蔡昉)의 관점과 동일함. 중국은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인구 교육의 보너스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들어섰음. 올해 중국의 대입 응시자 수는 1,078만 명이고 매년 대학입시 응시율도 90%에 달함.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는 출산을 장려해야 할 것임.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인프라건설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독일, 일본, 한국 등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음. 앞으로 기존 인구에 대한 사회교육 측면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할 것임.

Q 3. 중국정부가 개혁개방의 확대 및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등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금융·자본 시장의 개방 확대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음. 그러나 외국인투자자가 실감하는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의 실제 개방 속도는 느리다고 느껴짐.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A 3. 현재 중국은 개혁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실제로 추진하고 효과를 달성할 것인가는 중국이 해결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함. 중국은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부처 간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 조율과 협력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중국은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과 상하이 푸둥신구(浦东新区)에 대해 입법 측면에서 특권을 부여하는 시범정책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 우선 이 두 지역에서 시범정책을 추진한 후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함. 중국이 상하이(上海) 자유무역구를 건설했던 당시 원래는 3년 내에 시범과 개혁을 달성할 계획이었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하이 자유무역구 개혁의 주요 내용은 금융 개혁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웠음. 그 후 중국은 잇따라 십여 개의 자유무역구를 추가로 설립하였음.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금융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여러 가지 규정과 제한을 한꺼번에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임. 중국 정부는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정책과 법률적 근거가 아직 부족하고 일부 정책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음. 개혁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먼저 시범을 추진하고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현재 중국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의 시범을 통해 회계제도, 변호사제도, 금융제도 등 여러 면에서 개혁의 시범을 시도하고 있음. 하이난은 선전(深圳)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하기 쉽고 내부와 외부의 문제점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음. 그 외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음. 그리고 디지털 세금, 플랫폼 독점 등 정보와 관련된 디지털경제의 개혁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국가들이 모두 고민하고 있는 문제임.

Q 4. 발표하신 내용 중에 내부 체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체제개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음.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재미있기도 하고 궁금한 점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접종자가 시노팜과 시노백 두 가지 백신 중에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임. 이런 현상은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고 계획경제 시대의 배급방식이라고 생각됨. 이런 문제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혹시 기회가 되면 이러한 계획경제 시대의 방식을 청산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A 4.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함. 사람은 한 가지 체제 내에서 장기간 생활하다보면 그 체제에 적응하게 되고 따라서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됨. 저 자신도 외국사람들이 어떤 건의를 해주었을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음. 일례로 지난 90년대 제가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일본은 수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수출을 확대해야지 왜 수입을 장려하는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음. 그리고 제가 EU에서 근무했을 때 외국학자가 고령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도 고령화 문제에 대해 중시할 것을 지적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중국은 출산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음. 그

러나 지금에 와보니 모두 일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 질문하신 코로나 백신의 선택 문제에 있어서 솔직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음. 단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백신은 공공재이며 공공재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단일한 특징이 있다는 것임. 솔직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시노팜과 시노백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됨. 그러나 앞으로 해외 백신이 유입되고 유료 접종의 선택 사항이 생긴다면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이며 시장경제의 법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됨.

Q 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최근 선전(深圳)과 청두(成都)에서 각각 2월과 6월부터 "참고가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정부가 강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참고가격으로 책정하는 이 제도는 재산권 침해이며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현상이라고 생각됨.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5. 말씀하신 부동산 정책이나 베이징(北京)의 자동차 구매제한 정책 등의 내용은 현재 국내에서도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임. 우선 부동산 정책 면에서 현재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이 아주 부족하고 공급측면에서는 토지정책, 수요측면에서 통화정책밖에 없으며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이 없음. 중국에서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관련 행정수단들은 완전한 시장화를 실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한 부득이한 선택이며 이런 행정수단은 앞으로 1~2년 정도 지나면 거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부동산세 도입과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토지 공급의 탄력성과 시장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 것임. 선전이나 항저우(杭州) 등 인구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폭등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한계소비성향이 감소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Q 6. 발표 중에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핵심은 중국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산업이 포함된다고 생각함. 지난 2월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의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조사를 진행할 것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6월 8일 저녁에 백악관에서 조사결과인 "미국의 공급망 차질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서 제기한 공급망 개선의 방향을 요약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또는 동맹국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임.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반도체의 경우를 예로 들어 미국이 동맹들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면 중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고 중국은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함. 미국의 공급망 개선 계획이 중국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개선에 대한 중국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예상하시는지?

A 6.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글로벌 산업체인이 단축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며 앞으로 민생이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산업들은 자국이나 동맹국가, 주변국가, 또는 통제 가능한 국가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번에 미국의 공급망 조사에 관련된 네 개 산업들도 이런 경우에 포함됨. 중국도 작년 발표한 "6대 보장(六保: 일자리, 기본민생, 기업, 식량과 에너지, 산업체인과 공급체인, 기초 행정조직의

은행 등 6가지 업무의 안정)" 정책 중에 산업체인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 물론 중국이 산업체인의 안정성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함. 중국의 대책을 말한다면, 중국은 공급이 중단되면 안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핵심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펀드 등 방식을 통해 "국가 전략 핵심 역량"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기타 대부분 산업들은 개방형 시장시스템과 글로벌 분업 시스템을 통해 발전시키고자 함. 그 외 전반적인 산업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중국의 여러 가지 산업정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Q 7. 발표하신 내용 중에 중국의 생산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는 아직 부진한 상황이며 그 이유는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과 서비스업의 느린 회복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한국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바닥경기가 나빠서 소비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음.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외에 최근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소비가 부진하게 된 중국 사회의 변화도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함. 예를 들면 요즘 중국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탕핑족(躺平族, 누워서 아무 것도 안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저항하는 젊은 무리라는 뜻) 현상이나, 중국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현상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심각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됨. 영세기업의 경영난은 회복 가능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한번 심각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A 7. 말씀하신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과 서비스업의 느린 회복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은 코로나 이후 중국의 소비 회복속도와 소비의 비중이 아직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단기적인 원인임. 그리고 탕핑족 문제나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을 고려한 내수 확대의 장기적인 해결책은 오늘 발표자료 중에 자세히 나와 있음. 바로 일자리 촉진, 사회보장시스템 완비, 소득분배 최적화, 중산층의 비중 확대, 소비 환경 개선 등을 들 수 있음. 소비가 위축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의 단기적인 요인과 사회구조 측면의 장기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중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증장기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것임. 대략 2012년 이후부터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했는데 부동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은행 대출로 집을 구한 젊은 층의 소비 능력이 약화되면서 소비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중국은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해서 찾고 있음.